서초구, 고속터미널 고가 하부 경관조명 개선사업 완료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반포동 18-25 일대 '고속터미널 고가 하부 경관조명 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터·세빛 관광특구' 지역인 고속터미널 고가 하부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그동안 고가 구조물 특성상 발생했던 어둡고 침체된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안전 중심의 보행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도시경관 향상 사업의 일환이다.

고속터미널은 지하철과 버스터미널, 상업시설 등이 밀집해 보행자가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구조물 특성상 고가 하부는 자연광이 차단되고 조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야간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으로 지적된 바 있다.

또, 차량 통행량이 많은 도로와 인접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각적 인지성이 낮아지는 등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고가 하부 구조와 보행자의 보행동선을 분석해 경관조명 235개, 투광등 68개, 물결등 24개 등 총 327등을 설치했다. 설치된 조명은 부드럽고 따듯한 느낌의 3,000K 색온도로 교량 하부와 안전 펜스에 균형 있게 배치돼 고가 구조물에 의해 발생하는 음영 구간을 최소화하고 야간 운전자의 원활한 시야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이번 고속터미널 고가 하부 경관조명 개선으로 고터·세빛 관광특구 야간환경을 정비해 특구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보행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 미세플라스틱'까지 잡아낸다… ' 대기 분석기술' 특허 등록

市 보건환경연구원, 3년 연구 끝에 '미세먼지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 분석방법' 특허 등록

서울 대기환경에 최적화된 시료 채취 및 전처리 방법 적용해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 개선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하 연구원)이 대기 중 미세먼지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세플라스틱은 눈에 보이지 않는 1㎛~1㎜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입자로, 자연적으로 거의 분해되지 않는 합성고분자화합물로 정의한다.

연구원은 지난 2021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중 최초로 라만(Raman) 분광기를 도입해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을 연구하고 있다. 이후 지속적인 연구와 개선을 통해 실험실 여건과 서울시 대기환경에 최적화된 시료 채취와 전처리 방법을 적용한 '서울형 대기 중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을 개발했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대기 중 시료를 채취해 유기물 제거 및 여과 후, 라만 분광기를 활용해 미세플라스틱 개수와 종류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대기 중 1㎛ 크기 작은 미세플라스틱 개수와 종류까지 정확하게 분석해 낼 수 있다.

시료 내 유기물 제거를 위해서 강력한 산화제인 30% 과산화수소 용액에서 초음파를 조사하고 유기물이 제거된 시료는 분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실리콘 필터로 여과 후 라만 분광기로 미세플라스틱을 분석한다.

특허에는 대기 시료 채취 방법, 효율적인 유기물 제거 및 여과조건, 라만 분광기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분석 과정과 조건 등을 명시했다.

특히 이 기술은 시료 전처리 과정에서 여과량을 조절해 과포집으로 인한 입자 중첩 문제를 해소하고 입자 크기별 분석 조건을 최적화해 분석 정확도는 높이고 분석 시간을 단축해 차별성을 확보했다.

채취된 시료 무게를 정밀하게 측정해 기준치 초과시 시료 여과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필터 내 미세플라스틱 입자가 겹쳐 쌓이는 현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특허는 지난 3년여의 연구 끝에 서울시 대기질에 최적화된 미세플라스틱 분석기술을 개발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값진 성과이다."라며 "앞으로 끊임없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업무에 적용하여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환경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장성 기자

동대문구, 혁신어워즈 성료… 현장행정 성과 한자리에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는 지난 25일 「2025 동대문 혁신어워즈」를 개최했다. 동대문 혁신어워즈는 올 한 해 현장에서 추진한 실제 성과를 공유하고 평가하는 자리로, 직원들이 만들어낸 변화와 성과를 조직 전체와 함께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혁신어워즈는 참가팀 모집부터 예선평가, 본선 발표까지 약 두 달간 진행됐으며, 총 16개 팀이 참여했다. 9개국(소)에서 추천된 직원평가단 27명이 본선 진출팀 6개를 선정했고, 본선에서는 직원 200명이 무선투표로 실시간 평가에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최우수상은 중랑천에 서울 자치구 최초 하천형 수상스포츠 체험교육장을 조성한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팀이 수상했다. 해당 교육장은 총 5,673명이 이용했으며 만족도 98%로 큰 호응을 얻었다.

우수상은 모바일 행정전화 도입으로 공무원 개인정보 노출 문제를 개선한 스마트도시과 정보통신팀, 불법 노점·구조물 정비로 걷기 좋은 환경을 만든 도시경관과 가로정비팀이 받았다.

장려상은 경로당 급식체계를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개선한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기부채납 시설을 서울시 최초 '자치구형 공공컨벤션'으로 재탄생시킨 경제진흥과 기업지원팀, 맞춤형 마음건강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자살률을 크게 낮춘 건강관리과 마음건강팀이 선정됐다.

구는 최우수상 팀에 상금 100만 원과 국외연수를 지원하고, 우수상·장려상 팀에는 각각 80만 원과 50만 원의 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여러분의 열정과 도전이 구정 변화를 이끌고 주민의 삶을 바꾸는 힘"이라며 "우리 조직 안에 자리 잡은 혁신 DNA를 확인한 뜻깊은 시간"이라고 격려했다.

구로구, 서울대 재학생과 함께하는 진로 이야기 '촉촉콘서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관내 중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3일 '서울대 멘토들이 전하는 진심 어린 진로조언: 촉촉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촉촉콘서트'는 구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와 서울대학교 재학생 멘토링(상담) 동아리 드림컨설턴트가 공동 주관하는 청소년 진로 소통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진로 강연과 학과 정보를 제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탐색과 설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서울대 드림컨설턴트 멘토(지도자) 15명이 참여하며, 관내 중학교 1~3학년 80명을 대상으로 구로창의문화예술센터에서 오후 2시부터 진행된다.

콘서트는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서울대 재학생 멘토(지도자)가 '자신의 꿈을 찾게 된 과정, 청소년 시기의 고민과 걱정'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고, 2부에서는 서울대 각 학과와 관련 정보를 소개하며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다.

참가 신청은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구로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QR(큐알)을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접수 20명과 학교추천 60명을 포함해 총 80명을 모집한다. 학기 중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별 신청 학생은 체험학습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촉촉콘서트가 청소년들이 미래를 꿈꾸며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함께 성장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외직구 어린이 겨울철 의류·잡화 등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검출

'어린이 상하복 세트, 조끼 등' 유해물질 국내 기준치 초과, 물리적 기준 미달… '판매 중단 요청'

서울시는 겨울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겨울의류.잡화, 완구 등 총 24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제품이 산업통상부가 고시한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고 27일(목) 밝혔다.

이번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의류.잡화 15개 제품, 초저가 어린이제품 9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 화학물질 검출,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했다.

어린이 의류와 잡화 2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다.

방한 3종 세트(모자·목도리·장갑) 가죽 장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DEHP 등 7종 총합 0.1% 이하)의 203배 초과 검출됐다. 겨울 상하복 세트는 지퍼에서 납이 기준치(100㎎/㎏ 이하)보다 최대 4.5배 초과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로 정자 수 감소, 불임, 조산 등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접촉 시 눈,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납은 안전 기준 이상으로 노출되면 생식 기능에 해를 끼칠 수 있고 암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임신 중에는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 학습과 행동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어린이 의류 3개 제품은 물리적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점퍼 1종은 목 부분에 유아복에 금지된 장식 끈이 있었다. 조끼는 의복을 잠그기 위한 고리의 원주가 기준치(7.5㎝)보다 길어 질식, 걸림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점퍼는 지퍼가 부착 강도 시험에서 탈락해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어린이 완구와 기타 제품도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물리적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

스티커는 원단과 접착면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최대 58배, 납은 기준치 1.7배, 카드뮴은 기준치(75㎎/㎏ 이하)의 최대 12배 초과 검출됐다.

머리빗의 경우 빗살 끝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최대 3.5배 초과 검출됐다. 매직워터북은 스프링 양 끝이 날카로워 다칠 위험이 있었다.

카드뮴은 뼈에 이상을 일으키거나 간과 신장에 축적되는 발암성 물질로 호흡계, 신경계, 소화계 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 판매 중단을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요청했다. 시는 내년 1월에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유아용 목욕 용품과 섬유 제품 안전성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이 있으면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미끼 매물·무자격 중개 등 불법행위 적발

10~11월, 의심 매물 및 부동산 중개업소 조사… 적발된 업체, 과태료 부과·수사 의뢰

"수도권 빌라 1억 대 매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광고 매물이 서울시 조사에서 적발됐다. 무자격 중개보조원이 신분을 숨기고 안내와 상담까지 전담한 부동산중개업소도 확인됐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플랫폼에 게시된 허위.과장 의심 광고를 제보받고 등록 매물을 점검한 결과, ▲의뢰받지 않은 매물 게시 ▲중개보조원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등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시는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시는 지난 10.23.(목)~11.19.(수) 시민 제보가 있었던 부동산중개업소 4곳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중개업소 3곳은 실제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다른 부동산의 보정된 사진을 활용해 무려 1,102건이나 광고를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관외 지역 매물도 대량 등록돼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매물장(의뢰서)을 요구했으나 제출하지 못하자 시는 등록관청인 관할 자치구에 과태료 부과와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는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및 사실과 다른 사진 게시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현장 점검과 통화 녹취 분석 결과, 등록된 공유 오피스는 비워두고 부동산 플랫폼에 광고된 대표번호로 전화하면 중개보조원이 본인 신분을 미리 밝히지 않고 상담과 안내, 현장 방문을 전담하는 등 반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중개업소 한 곳은 중개보조원 고용 신고조차 하지 않았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르면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중개보조원'임을 밝혀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보조원은 '고용 신고' 의무가 있으며, 미신고 시 행정처분 대상이다. 시는 적발된 신분 미고지 및 고용 미신고 사례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일부 사무소에서는 대표의 업무용 휴대전화를 보조원에게 맡겨두고 직접 광고를 게시토록 한 '무자격자 표시.광고' 혐의도 확인됐다. 시는 중개사무소 대표의 자격.등록증 대여 의심 사례를 확인하고, 중개보조원의 광고 및 중개행위 혐의 확정을 위해 민생사법경찰국에 중개업소 3곳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보조원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상태에서 광고를 직접 게시하면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제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서울시는 이번 단속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에 ▲실명 인증 강화 ▲광고 의뢰서(매물장) 첨부 등 재발 방지 시스템 구축을 건의할 방침이다. 또 부동산 표시.광고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고 서울시(신속대응반)에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협력하여 즉시 조사 및 강력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장성 기자